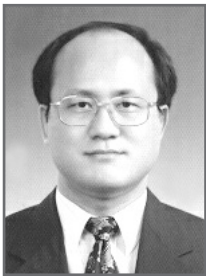


2008년 환경정책 추진 방향



최 흥 진 환경부 전략총괄과장

☎ 02-2110-6670 hjchoi@me.go.kr

필자약력

- 연세대 화학공학, 미국 델라웨어대 환경공학 박사
- 환경부 정보화담당관, 환경기술과장, OECD 파견, 환경보건정책과장

1. 환경정책의 추진여건

세계는 지금 환경과 경제가 분리될 수 없는 사회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FTA 등 무역자유화의 확대와 BRICs의 급성장으로 인한 세계 경제활동의 증가는 자원과 에너지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원과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구조로의 개편이 불가피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경제 통합체제 하에서는 시장경쟁력은 가격·품질이 아닌 생태효율성(Eco-efficiency)과 환경기술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전략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영국정부에서 발간한 Stern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다에너지 소비체제가 지속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도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이자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서 2013년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한편, 선진국들은 강력한 환경규제를 무기로 세계시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은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환경규제를 통해 세계시장을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을 유도하고 있다.

EURO-V(자동차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에서 보듯이 제일 강한 수준의 규제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보다 쾌적하고 품격 높은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피해 우려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성질환의 하나인 천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4.1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다. 편하게 숨쉴 수 있는 공기, 도심에서 자연미를 느낄 수 있는 공원과 숲, 맥감고 뛰놀 수 있는 생태하천 등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생활공간의 창출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성 질환자 추이(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만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중복인원 제외)	545	570	614	656	665
아토피 피부염	112	115	116	115	108
알레르기 비염	296	319	355	389	401
천 식	198	199	210	226	231

2. 2008년 환경정책 추진방향

이러한 정책여건 변화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환경국가 건설’을 중장기 정책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08년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환경보건정책 강화 등 6대 전략목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우선, 도시내 생태공간(Eco-Space) 확충을 위해 담장, 옥상 등 도시공간의 녹화를 확대하고 직강화·콘크리트화·건전화되어 있는 도시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 조성시 조성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연순환기능에 할애하도록 하는 생태면적율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맑은 도시공기 확보를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의 본격 시행, 저공해자동차 및 친환경연료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저공해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진입을 금지시키는 환경지역(Enviroment Zone) 지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환경용량에 기초한 지역환경관리목표제 도입 추진, 도시의 우수환경자원과 환경개선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도시얼굴갯기 운동 전개 등 도시 환경성 제고를 위한 기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②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의 강화

환경보건법 제정 등 '09년까지 환경보건정책의 법적 기반을 완비하고,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를 '07년 3개소에서 '08년 6개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감·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놀이터, 보육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산모·영유아, 폐광지역주민, 노령인구,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실태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양

공개제도 첫 도입, REACH 사전등록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스톡홀름협약 국가이행계획서 작성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③ 자연자원 보호 및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일원 및 도서·연안 등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에 대한 생태계조사를 확대하고, 습지총량제·녹지총량제 등 자연생태계 훼손방지대책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외반출 승인대상종 지정이 확대되고, 반달가슴곰·산양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지속 추진되는 등 생물자원 관리기반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일원화 및 체계화를 위한 통합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④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 구축

하천·호소를 대상으로 용수 목적별 물이용지도를 작성하고, 하천호안의 식생 및 하도의 자연성에 따른 하천자연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막여과 정수 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수돗물 품질 고도화를 추진하고, 도·농간 하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군단위 이하 하수도보급율을 '05년 35.8%에서 '08년 48%로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소규모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토양·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한 클린주유소 설치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⑤ 자원절약과 자원순환성 향상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실적평가 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촉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유해폐기물 안전처리 강화를 위해 RFID 기반으로 의료폐기물 관리를 의무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해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의 에너지회수 촉진대책을 마련하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대상으로 재활용 의무율을 부과·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⑥ 환경·경제·사회의 통합발전체계 구축과 기후변화 대응 강화

기업의 환경경영 확산을 위해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진흥법령을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 R&D에 1,058억원을 투자하고, post-차세대사업('11~'20) 추진을 위한 기획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생필품 위주로 유통업계 PB상품(Private Brand Goods)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 유도를 통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및 국제협력 등 기후변화대응 제4차 정부종합대책('08~'10)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환경부에 기후변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한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생태계·보건·재해 등 부문별로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3. 맺는말

신정부가 출범한 2008년 올 한 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쾌적한 삶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국제환경규제 대응에 바쁜 기업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지구환경문제에 적극 동참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만큼 할 일은 많아지고, 어느 하나 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를 위한 환경부의 힘찬 발걸음은 올 해도 계속될 것이다.